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09. 23. (수요일)

"북극은 누구의 안보를 위한 공간인가"... 그린란드를 둘러싼 강
대국 경쟁과 자기결정권의 충돌

- 미국의 북극 안보 전략, 덴마크의 영토 주권, 그린란드 주민의
독립 열망이 맞부딪히고 있다. -



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U.S. Space Force, 1st Lt. Danielle Rose, 2024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얼음으로 막혀 있던 북극항로가 열리고, 희
토류·석유·가스 등 핵심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은 더 이상 지리적으로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군사 안보, 자
원 공급망, 기후위기가 동시에 교차하는 새로운 전략 요충지로 떠올랐

다. 특히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을 잇는 군사적 관문이자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북극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대국의 논리가 그린란드 주민의 의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고 미사일 방어 및 우주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영토 주권이 외부 국가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린란드 주민들 역시 자신들의 미래가 강대국의 안보 거래나 자원 개발 논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독립 여부와 정치적 지위는 주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스템 충돌: 북극을 둘러싼 세 가지 이해관계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에 속해 있지만, 자체 의회와 정부를 운영하는 자치령이다. 1979년 자치권을 얻은 데 이어 2009년 자치정부법 시행으로 그린란드인의 자기결정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됐으며,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다만 국방·외교·통화 정책은 여전히 덴마크가 담당하고 있어, 그린란드의 미래는 지역 내부의 선택만으로 완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첫 번째 이해관계자는 북극을 새로운 안보 전선으로 바라보는 미국·러시아·중국 등 강대국이다. 미국은 그린란드 북서부의 피투피크 우주기지(구 툴레 공군기지)를 미사일 조기경보와 우주 감시 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극권 군사기지와 쉐빙선 전력을 강화하고, 중국이 북극항로 이용과 광물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적 접근권과 영향력 확보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두 번째 이해관계자는 덴마크 정부와 그린란드 주민이다. 덴마크는 미국 및 NATO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북극 방위력 증강에는 동의하지만 그린란드의 주권과 지위는 외부 세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린란드 내부에서도 경제적 자립을 전제로 한 독립을 장기 목표로 삼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독립의 시기와 방식은 외부의 전략적 필요가 아니라 주민들의 민주적 선택에 따라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세 번째 이해관계자는 북극 군사화와 개발 경쟁이 낳을 환경·인권 문제를 우려하는 국제사회, 환경단체, 원주민 공동체다. 북극 해빙은 새로운 항로와 자원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해양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외부 국가와 기업이 희토류·광물 개발을 주도할 경우 지역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채 환경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정학적 갈등: 러시아·중국 견제와 미국의 북극 전략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는 미·러·중 경쟁과 맞물리며 더욱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 연안 지역의 군사기지와 쇄빙선 전력을 확대하며 북극항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중국 역시 자신을 '근북극 국가'로 규정하고 북극항로, 광물 탐사, 인프라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북극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일은 북미와 유럽을 향한 미사일 위협을 감시하고, 새로운 해상 교통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문제와 연결된다. 그린란드에 매장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은 전기차·풍력발전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과 연결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과 유럽에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강대국의 전략적 계산이 커질수록 그린란드 주민의 정치적 선택권은 주변으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 안보와 자원 확보를 이유로 그린란드를 '거래 가능한 전략 자산'처럼 바라본다면, 주민의 자치권과 독립 논의는 실질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이는 군사적 필요와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소규모 지역의 운명을 결정해 왔던 과거 제국주의적 질

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국제질서의 딜레마: 안보는 주권을 넘어설 수 있는가

그린란드 갈등은 국제법과 동맹 질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과 덴마크는 모두 NATO 회원국으로서 러시아 견제와 북극 방어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한다. 그러나 동맹국 사이에서도 한 국가의 안보적 필요가 다른 국가의 영토 주권과 충돌할 경우, 안보 협력은 오히려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덴마크는 북극 방위력 증강, 경제 협력, 인프라 투자 등은 논의할 수 있지만, 그린란드의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법 역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며, 독립 여부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는 강대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지역의 정치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재편할 수 없다는 국제 규범과 연결된다.

북극의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 안보의 비용과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안보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남는다. 그린란드는 이제 북극의 전략적 요충지를 넘어, 국제사회가 안보와 주권,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담당 부서 제4회 HLMUN PRESS팀	팀장	총괄	최다인
	팀원	기사 작성 및 번역	장서연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hallym40th_chanlan@naver.com			
한림대학교 제4회 모의유엔협회 hallymmun@gmail.com			